

시대의 변화 답아 '5월 정신' 되살려라

〈목차〉

제1부 되짚어 본 5·18

제2부 민주·인권의 가교

제3부 긍정에너지로 승화



5월을 넘어 광복을 넘어

5·18 민주화운동 30주년 심층 기획

④ 갈길 먼 기념사업

올해는 5·18 민주화운동 30주년이 되는 해다. 1981년 이후 5월이면 도청과 금남로에 대규모 군중이 모여 학살의 진상을 알렸고, 광주 도심 곳곳에서도 격렬한 시위가 계속됐다.

민주주의와 인권의 수호, 불의에 대한 항쟁, 나눔과 평등, 평화 통일의 지향으로 요약되는 '5월 정신'을 계승하고, 민주시민의식과 공동체 정신을 일깨우기 위함이었다.

하지만 자라나는 세대들은 5월 항쟁의 실상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다. '5·18 기념행사'는 5·18의 가치를 재평가하고, 이를 미래

을 지원하기 시작했다. 14주되었던 해 5월 행사를 시작으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주장하는 운동이 벌어졌다. 또 같은해에는 5·18기념재단이 설립됐고, 시민운동단체들이 행사를 조직해 5·18기념행사를 열기 시작했다.

◇5·18의 가치를 널리 알리는 기회로=전문가들은 5월 항쟁 기념사업을 놓고 아직 '갈 길이 멀다'는 입장이다. '우여곡절' 끝에 기념행사의 합법화와 예산 지원 등을 이뤄냈지만 해마다 기념사업에 참여하는 시민들의 관심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현상이 5월 행사가 갖는 의미를 문화적으로 확장하지 못하고, 추모



5·18 민주화운동이 국가기념일로 제정된 1997년 이전에는 전투경찰의 저지선을 뚫고, 자욱한 최루탄 연기 속에서 5월 기념행사를 가져야 했다. 사진은 1987년 5월17일 5월 시위 도중 상복을 입은 5·18 희생자 유가족이 경찰에 연행되고 있는 모습(위)과 지난해 5월17일 열린 제29주년 전야제 모습. <광주일보 자료>

내용없는 행사 매년 되풀이 시민들 외면

30돌 기념사업 전반 총체적 재점검 필요

사회에 제대로 전달해주는 역할을 한다.

30주년을 맞아 5·18기념재단, 5·18민주화운동기념행사위원회(이하 행사위), 5·18연구소 등은 기념행사 정착을 위해 대규모 토론회를 준비하고 있다. 의례적 행사로 전락하고 있는 5·18 기념행사를 재점검하고, 미래지향적인 행사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다.

◇눈물로 정취한 5·18 기념사업=5월 기념행사는 크게 5·18 민주화운동 국가기념일로 제정된 1997년 이전과 이후로 구분된다.

1980년대 초반에는 망월역에서 추도식을 열기 위해 유족들을 중심으로 전투경찰과 격렬한 몸싸움을 벌여야 했다. 또 1985년 전남대 '오월투쟁특별위원회'가 조직돼 1천여 명의 학생이 도심 곳곳에서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이 시기에는 5월을 기념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었고, '눈물'과 '투쟁'을 통해 기념행사를 열어야 했다.

1988년 5월은 도청과 금남로 일대에서 전투경찰의 저지를 받지 않고 기념행사를 진행한 첫 해로 기록됐다. 6월 항쟁과 정치권의 여소야대 국면 등으로 축제 분위기로 치러진 첫 5월 행사였다.

1994년 김영삼 정부는 5월 행사 개최 비용

나 의례 수준에 머물러 있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기념행사의 '형식'을 갖췄지만 시민들을 광장으로 이끌어 낼 '내용'이 부실하다는 지적이다.

이 때문에 "전야제 문화 공연 말고는 볼 것이 없다"는 말도 공공연히 나오고 있다. 그만큼 시민들의 관심을 끄는 행사가 없는 것이다. 특히 예산을 여러 단체가 나눠 집행하다 보니 내실있는 행사를 치러내지 못하고 있다. 항쟁 29주년이었던 지난해 4억여원의 예산을 가지고 행사위가 17개 사업을 펼쳤고, 23개의 단체가 25개의 행사를 나눠 치렀다.

부족한 예산을 여러 단체가 쪼개 개별 행사로 준비하다 보니 대부분 내용이 부실해질 수밖에 없다.

5·18의 전국화를 위해 서울, 경기, 부산, 경남 등지에서 치러진 행사의 예산도 각각 300만~500만원 수준이어서 이들 지역에서의 기념사업은 홍보물과 기념품을 나눠주는 수준에 그쳤다.

반면 지난해 5·18기념재단이 광주시교육청 인정교과서 '5·18 민주화운동'을 편낸 것과 '오월어머니의 집'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고향인 경남 함안지역 어린이 40명을 광주에

초청해 5·18을 알린 프로그램은 의미있는 시도로 꼽힌다.

5·18연구소 김기곤 학술연구교수는 "행사가 몇몇 단체 인사들이 돌아가면서 조직되다 보니 기념행사가 해마다 같은 프로그램을 되풀이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면서 "행사의 구조적 개편이 필요하고, 사전 준비기간을 대폭 늘려 5·18의 가치를 제대로 기념할 수 있는 내실있는 행사를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30주년행사위 허담용 기획단장은 "올해를 5·18 민주화운동 40주년을 준비하는 첫 해로 삼고, 2월초부터 대규모 토론회를 열어 기념사업 전반에 대해 재점검하겠다"며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마을 단위 행사인 '찾아가는 5·18 마을 행사' 등을 통해 시대의 변화에 발맞춰 나가겠다"고 말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항쟁의 주역

조비오

“젊은이들에 5·18 가치 심어줄 정신·문화적 활동 펼쳐야”

“이유도 없이 학살당한 시민과 명령에 따라 총을 쏘아 했던 군인을 위해 하루하루 기도를 올리는 성직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30년 전인 1980년 5월18일, 이 땅에서는 참혹한 학살이 벌어졌다. 군부 독재의 야욕에 맞선 시민들에게 무차별적으로 총탄이 난사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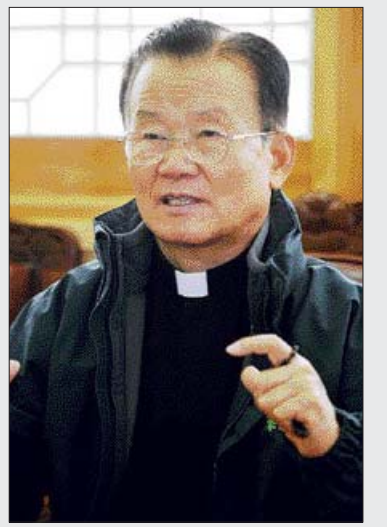
5·18 민주화운동을 이야기할 때 광주지역 시민사회단체의 대표적 원로인인 조비오(70) 신부의 이름이 반드시 오른다. 그는 한 명의 목숨이라도 더 구하기 위해 항쟁 기간 동안 참혹한 학살 현장을 떠나지 않았고, 군인들의 헬리콥터 기총소사를 처음으로 증언했다.

올해 5·18 30주년을 맞는 그의 감회는 남다르다. 그때의 비극이 점차 '잊혀진 역사'로 치부되는 요즘의 사회 분위기 때문이다.

“역사는 망각을 동반한다. 요즘 젊은이들이 5·18의 진실과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는 정신·문화적 활동이 절실하다. 편협한 지역주의에서 벗어나 5·18이 전국화, 세계화될 수 있도록 모두의 지혜를 모아야 한다”

지난해 12월 그가 5·18 기록물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추진하는 위원회 위원으로 활동을 시작한 것도 5·18을 올바르게 기억하기 위해서다.

그에게 있어선 80년 5월의 기억은 30여 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생생하다. “시민군들이 계엄군과 경찰 4명을 붙잡아 옛 전남도청으로 끌고 왔는데, 옥을 하거나 매질을 하는 시민이 단 한 사람도 없었다. 오히려 성난 시민들에게 봉변을 당하지 않도록 군복을 벗겨 자신들의 옷을 입혀 돌려보냈다. 하지만 계엄군은 항복을 하기 위해 손을 들고 나오는 시민군에게도 마구 총을 쏘았다.”



성직자로서 그를 두 번 울렸던 것은 계엄군도 또 다른 희생자라는 사실이였다. 항쟁이 끝난 뒤 상무대 영창에 갇혀 자신을 가둔 군인들이 진정으로 참회할 수 있도록 눈물의 기도를 올려야 하는 성직자의 소명을 묵묵히 따라야 했다.

“불신과 갈등의 시대에 군생활을 해야했던 젊은이들의 아픔도 우리가 달래줘야 할 몫이다. 그들에게 총을 들게 했던 사회구조적인 문제가 이같은 비극을 만들어 낸 것이다.”

그는 5·18의 진정한 해결과 화해를 위해서는 발표명령자, 암매장 등 숨겨진 진실을 밝혀내고, 평화와 민족 대화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북분단 상황에서는 언제든 군부의 정치세력화가 발생할 수 있다. 5·18의 숭고한 가치를 통일의 밑거름으로 승화시키고, 세계 평화를 위해 광주가 할 수 있는 일들을 묵묵히 해나가는 시민의식이 필요하다.”

한편 그는 5·18 민주화운동 때 시민수습대책위원으로 활동했고, 5·18 기념재단 초대 이사장 등을 역임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사진=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법원 정매부동산의 매각 공고. A large legal notice containing multiple columns of text detailing property auction information, including dates, locations, and contact details for the court and real estate agents.